

“불법 보편화, 공매도 금지 불가피… 제보자에 억대 포상금”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이자이익 60조 ‘역대최고’ 어떤 혁신의 대가인지 의문 들어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개편 의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공매도 시장에 대해 “지금 상황 기준으로는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된 장”이라며 “불법이 만연하고 적정 가격 형성에 장애를 줄 환경이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 금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아니나는 질문에 “정당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는데 이미 100여개 종목 이상이 무방비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은 전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키로 했다. 그간 공매도 금지 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비교해 (은행들이) 어떤 혁신을 해서 60조원의 이자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들이 변동 금리 위주로 고객에게 리스크를 모두 전가하는 수익구조도 꼬집었다.

은행권이 내놓은 상생금융 역시 진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이후 600개 가까운 은행 점포가 사라졌다”며 “어려운 시기 금융소외계층의 접근성이 재고돼야 한다고 거듭 전했지만 KB국민은행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만 60개 넘는 점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카카오모빌리티 조사와 관련해서는 “수수료 계약과 광고 정보 이용료 계약이 구분된다는 쟁점은 잘 알고 있지만 왜 매출에 비례해서 정보 이용료를 주는지. 그렇다면 왜 이제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고 밸류에이션 부분에 반영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 증권신고서 등 관련 서류들을 볼 때 잘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들이 은행에 대해 왜 비난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지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반도체나 자동차 분야와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GTX-A 이용땐 수도권 30분 통행권 달성”

尹 대통령, 현장점검·주민 간담회
일정 앞당겨 내년 3월 GTX-A 개통
이동시간 1시간20분 → 19분 단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3월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점검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 전문가 등과 광역교통 문제의 해법을 논의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4월 개통 예정이었던 GTX-A(수서역~화성 동탄역) 사업 일정을 앞당겨 3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6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개통을 앞둔 GTX-A 노선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 지난 1일 ‘민생 탐방’과 지난 3일 ‘대한 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이은 민생 현장 행보다.

윤 대통령은 먼저 GTX를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의 광역철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광역교통망 구축의 성과를 주민 대표 및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 사업 일정을 앞당겨 GTX-A 노선은 내년 3월 개통, C노선(양주 더정역~수원역)과 B노선(인천 대입구역~남양주 마석역)은 각각 올해 연말과 내년 초 착공하게 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GTX-A 노선의 수서역~동탄역 구간이 개통되면 현재 약 1시간 20분 정도인 이동시간이 19분으로 1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GTX-A를 이용하면 수도권 30분 통행권이 달성된다”며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생기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변화를 설명했다.

주무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열기 위해 GTX A·B·C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기존 GTX 노선의 연장과 새로운 GTX 사업들의 신설 추진 방안을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또 원 장관은 GTX 이외에 8호선 연

장 별내선(2024년), 신안산선(2025년),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2026년)을 각각 개통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와 서남부 이동시간을 최대 75%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분당선(광교~호매실), 대장흥대선 등 신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에도 내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를 시작으로 태화강~송정 철도, 충청권 1단계(계룡~신탄진) 철도를 개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부터 한국형 대중 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를 도입해 GTX 등 출퇴근 교통비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과 저소득층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GTX-A 개통 준비를 맡고 있는 현장소장 등 공사 관계자와 GTX 기관사 등 열차 시운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안전 점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syj@

게임업계, 생성형 AI 인식전환 가능성도

» 1면 ‘AI의 은밀한 비밀’서 계속

실제로 생성형 AI를 이용한 웹툰으로 지목 된 후 악평이 쏟아진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과함께돌아온기사왕님’은 첫 회가 업로드 된 직후 생성형 AI로 작업했다는 논란이 일며 별점이 2.68 점(5점 만점)까지 떨어졌다. 독자들은 “다른 작가들의 그림을 무단으로 학습

한 AI를 작가가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네이버 웹툰 측과 작가진은 사과를 했으나 여전히 여론이 좋지 않다. 여론을 확인한 네이버 웹툰은 진행 중이던 공모전에서 생성형 AI 기술 활용을 제한한다는 조건을 달았고 카카오웹툰 스튜디오도 6월 진행한 공모전에서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처럼 대중의 생성형 AI에 대한 거부감이 크지만 도리어 저작권 등에 문

제가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네이버웹툰이 지난 5월 공개한 ‘툰필터’는 공개 일주일만에 2000만 장의 이미지가 생성됐고 10월에는 8000만 장을 넘겼다. 툰필터는 사진을 넣으면 네이버에서 현재되는 웹툰 스타일로 바꿔주는 이미지 생성 AI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게임업계에서 작화 작업에 생성형 AI가 활발하게 활용되지만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눈에 띠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인식 전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김서현 기자 seoh@



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방문한 김병수 김포시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포 편입, 시민 공감대 바탕 논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김병수 김포시장

김 시장 “김포시, 섬 아닌 섬 우려 서울 편입, 동반성장·시너지 기대”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한강 활용 확대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한 비전과 요청사항을 들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 집무실

에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면담했다. 김 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이라며 “지리

적으로 가깝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 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서해안 항구개발 등 김포시의 서울 편입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수상교통 등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오 시장은 김 시장에게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 정밀하고 객관적인 분석과 김포시민이 우려하는 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두지방자치단체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별개로 시민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 서울을 비롯한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는 내·외부 전문가로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의견’으로, 김포시민과 서울시민 모두의 공감대 형성과 동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편입 논의와는 별개로 그동안 서울·경기·인천이 협력해 온 것처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긴밀한 수도권 협력체계는 앞으로도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